

국민 경제인식 조사 분석

문재인정부 20개월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평가

이종인 수석연구위원
김영현 연구원

2018. 12

YDI Report

보고서의 내용은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머 리 말 》

‘최악의 실업률’, ‘소득격차 역대 최고’와 같은 언론기사 제목 뿐 아니라 산업계과 민생현장 등 곳곳에서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을 경고하는 신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대로 고공행진하던 대통령 지지율이 9월의 평양공동선언 이후 40%중반으로 곤두박질한 것도 이미 실패로 판명 난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잘못과 오류를 지적하며, 하루라도 빨리 기업과 시장 중심의 정도(正道)의 경제정책으로 회귀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2.0버전을 앞세워 기존의 정책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고집합니다. 경제는 단순논리가 통하지 않는 매우 복잡한 생태계입니다. 이러한 경제 생태계에 이념이나 심지어 정치적 도그마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작금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여론이 싸늘해지자, 또다시 포용국가론을 앞세워 추진하고자 하는 문재인 표 경제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정책보고서가 그 답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의도연구원에서 지난 12월 6일과 7일 이틀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2천여 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2년간 국민들의 체감살림살이를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과 재정확대,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들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조사

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독자여러분의 궁금증을 일소시켜 줄뿐 아니라, 연구를 통해 확인된 국민여론을 문재인 정부에서 겸허히 받아들여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실천과제들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서 하루 빨리 헤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여론분석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노동시장구조의 개혁과 경제전반에 대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달성될 수 있기를 국민과 함께 소망해 봅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이종인 경제정책실장과 김영현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를 포함합니다.

여의도연구원 원장 김 선 동

《 요 약 》

1. 조사 · 분석의 목적

한국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진단하고, 문재인 정부 20개월간 국민들의 체감 생활형편을 평가하고 전망함. 더불어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최저임금인상, 대규모 재정확장,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평가

2. 분석 요지 및 시사점

① 국민의 살림살이 평가 및 전망

국민들은 생계비 부담과 일자리 불안 등으로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가계 살림살이를 매우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부정적 평가(46.9%)가 긍정적 평가(19.3%)보다 2배 이상 높았음). 8월 조사 대비 부정적 인식 비율이 더욱 높아짐

②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과 재정확대, 탈원전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 비율이 높음. 특히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서는 보완 · 수정 · 폐지(67.9%) 여론이 지속추진해야(29.1%)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최저임금정책 역시 속도를 조절하거나 인상이 불필요(73.8%)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성정표를 보면, 부정적(45.1%)이 긍정적(32.1%)보다 월등히 높음. 특히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지역별로는 호남권, 직업별로는 사무 · 관리 · 전문직, 연령별로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부정적 인식이 높음. 더불어서, 보수는 물론 ‘중도’ 성향의 국민들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 국민들이 현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들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정책전환 내지 대대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다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trade mark인 ‘소득주도성장’ 및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치이념성향에 따라 ‘보수·중도=불만족, 진보=만족’으로 극명하게 대비될 뿐 아니라, 4개월 전 조사 대비 거의 변동이 없는 점을 주목할 필요. 이는, 이러한 정책용어가 정치적 이념으로 더욱 더 고착화되어 감을 의미함

③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양극화(45.1%),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은 소득격차해소(26.6%), 최우선 개혁분야는 노동시장개혁(25.5%)으로 나타남. 또한, 국민들은 경제성장이 중요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소득격차 해소뿐 아니라, ‘일자리 확충’과 ‘기업투자 확대’ 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

④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 반영될 것임. 조사 결과 같은 시기에 시행된 타 여론조사업체의 국정지지율 조사결과보다 8%p 낮은 41.0%로, 부정적 평가(44.9%)를 이미 앞지름(리얼미터 49.5%, 한국갤럽 49%)

같은 맥락에서, 12월 넷째 주인 현 시점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30% 중후반대일 가능성이 높음

또한, 보수와 진보 성향 간 극명한 대비 중 중도성향 국민의 부정평가 우세 및 긍정과의 격차 확대, 지난 8월 조사와는 달리 정부의

경제정책 지지성향과 대통령 지지도의 일치화,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부정평가 우세, 30~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점 등도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짐

《 목 차 》

제1장 조사의 개요	3
1. 조사 목적 및 내용	3
2. 조사 대상 및 표본의 특성	4
제2장 국민의 살림살이 형편 및 전망	9
1.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 생활형편 평가	10
2. 미래 살림살이에 대한 전망	10
3. 국민이 직면하는 경제적 애로	11
제3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15
1. 소득주도성장정책 평가	15
2. 일자리정책 평가	17
3. 최저임금 정책 평가	20
4. 재정투입 확대 정책 평가	22
5. 탈원전 에너지 경제정책 평가	24
6.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26
제4장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31
1. 한국 경제의 주된 문제점	31
2.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32
3. 우선적 경제개혁 분야	33
제5장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37
1. 국정운영 평가	37
2. 이념성향 · 지역 · 직업별 · 연령별 분석	38
제6장 시사점 및 결론	43
부록 : 국민 경제인식 조사 설문(안)	45

제1장 조사의 개요

제1장 조사의 개요

1. 조사 목적 및 내용

1) 조사의 목적

각종 고용 및 경제통계지표들 뿐 아니라 산업·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우리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국민들의 체감 살림살이를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봄과 더불어,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최저임금인상,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탈원전 에너지정책 등 현 정부의 구체적인 경제정책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해 보았다. 더불어서, 지난 8월에 수행된 제 1차 조사와 비교 분석을 통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여론 추이를 함께 고찰하였다.

본 조사 결과는 지역·연령·정치이념성향·직업 등에 따른 국민인식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국민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 조사의 내용

본 설문조사는 조사목적에 맞추어 조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첫째는 국민들의 살림살이 형편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관한 질문, 둘째,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문항. 셋째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 넷째,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포함한 전반적)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질문이다. 끝으로, 설문조사 대상자의 신상에 관한 질문 등이다 구체적인 것은 보고서 말미에 첨부한 설문지를 참고하면 된다.

설문조사의 내용

조사 내용	세부 조사 내용
국민 생활형편 평가·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생활형편에 대한 국민의 인식 ○ 향후 1년 가계 살림살이 전망 ○ 국민이 직면한 경제적 애로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주도성장정책 평가 ○ 일자리정책 평가 ○ 최저임금 인상 정책 평가 ○ 대규모 재정투입 정책 평가 ○ 탈원전 에너지 경제정책 평가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종합평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 경제개혁분야 우선순위
국정운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의 종합적 국정운영 평가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 직업, 지역 등

2. 조사 대상 및 표본의 특성

1) 조사 대상 및 분석 방법

본 설문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123,363명의 전화연결을 시도 하였으며, 그 중 불응답, 불성실 응답, 유효하지 못한 응답 등을 제외한 2,024명의 표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년 12월 6일(목) 10:00~18:00와, 27일(금) 10:00~12:00이었으며, 조사방법은 ARS 전화조사(휴대전화 RDD 70%, 유선전화 RDD 30%)를 이용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통계 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조사표 내에 작성된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유형화하여 교차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조사 개요

- 조사일시

2018년 12월 6일(목) 11:00~18:00 , 7일(금) 11:00~12:00

- 모집단 및 표본 크기

모집단 :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여

표본크기 : 2,024명

※ 응답률: 1.64% (총 123,363명 연결 중 2,024명 (유효)응답)

- 조사방법 : ARS 전화조사

휴대전화 RDD 1,419명 (70%), 유선전화 RDD 605명 (3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2.18\%P$ (최대허용 표집오차)

2) 표본의 특성

설문 응답자의 개인별 특성으로 성별, 연령별, 직업과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본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표본의 구성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49.6%, 여성이 50.4%로 구성되어 있어, 남성과 여성 비율이 비슷하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25.1%로 가장 많고, 다음이 40대로 20.4%, 50대 약 19.9%의 순으로 표본이 구성되었다.

조사에 응한 사람을 직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사무관리전문직이 2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자영업 21.4%, 주부 13.7%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가 30.1%로 가장 많았고, 서울 19.5%, 부산·울산·

경남 15.5% 순으로 나타났다.

전화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설문 표본의 개인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003	49.6
	여성	1,021	50.4
연령	20대	353	17.4
	30대	349	17.2
	40대	412	20.4
	50대	403	19.9
	60대이상	508	25.1
	직업	농림어축산업	91
	자영업	433	21.4
	판매영업서비스직	260	12.9
	생산기능노무직	189	9.3
	사무관리전문직	477	23.6
	주부	277	13.7
	학생	113	5.6
	무직퇴직기타	185	9.1
지역	서울	396	19.5
	인천경기	609	30.1
	대전세종충북충남	212	10.5
	대구경북	204	10.1
	부산울산경남	315	15.5
	광주전북전남	203	10.0
	강원제주	86	4.3

제2장 국민의 살림살이 형편 및 전망

제2장 국민의 살림살이 형편 및 전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19개월간 국민 살림살이 형편에 대한 평가와 향후 1년 생활형편에 대한 국민의 기대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애로나 고민이 무엇인지도 설문을 통해 조사해 보았다.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민 스스로 살림살이 형편이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비율(46.9%)이 좋아졌다(19.3%)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며, 향후에서도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더군다나, 지난 8월 조사에 비해서도 부정적 인식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국민들은 현재 자신의 살림살이에 평가뿐 아니라 향후 전망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며, 특이한 사항은, 정치이념 및 성향적으로 보수층이나 진보층 보다도 중도 성향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개월 전에 비해서는 특히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의 부정적 인식 비율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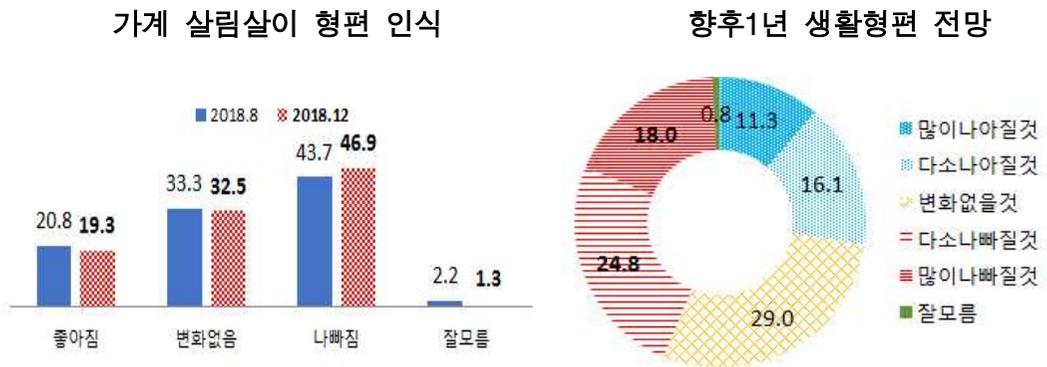
이념성향별 가계 생활형편에 대한 인식 및 전망

구분		현 정부 하 살림살이 평가		향후 1년 살림살이 전망	
		좋아졌음(%)	나빠졌음(%)	좋아질 것(%)	나빠질 것(%)
합 계		19.3 (20.8)	46.9 (43.7)	27.4 (26.6)	42.8 (41.9)
이념 성향별	보수(34.8%)	18.7 (20.1)	53.3 (50.6)	27.3 (24.8)	47.9 (47.6)
	중도(25.4%)	14.9 (14.8)	53.6 (53.5)	22.0 (19.2)	49.8 (51.2)
	진보(39.8%)	22.7 (24.8)	37.0 (32.2)	30.9 (32.6)	33.9 (31.5)

* 괄호 속은 2018.8월 조사 결과이다.

1.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 생활형편 평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9개월간 자신의 생활형편이 좋아졌는지 혹은 나빠졌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6.9%가 “나빠졌다”고 응답하였으며, 좋아졌다는 응답은 19.3%에 불과하였다. 4개월 전 조사(나빠짐 43.7%, 좋아짐 20.8%)에 비해서는 부정적 평가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가계 살림살이 형편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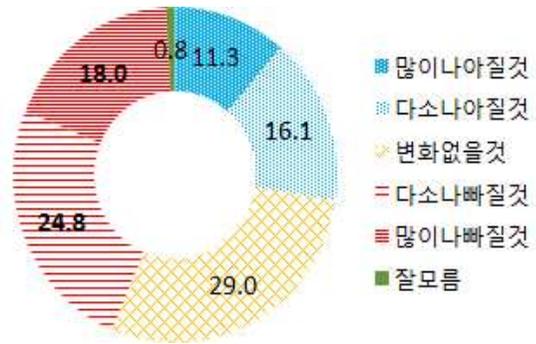
	매우 좋아짐	약간 좋아짐	이전과 비슷	약간 나빠짐	매우 나빠짐	잘모름	합계
빈도(명)	153	238	657	378	572	26	2024
비율(%)	7.5	11.8	32.5	18.7	28.3	1.3	100.0

2. 미래 생활형편에 대한 전망

향후 1년간 자신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앞서 살펴본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의 살림살이 형편 평가 항목과 마찬가지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42.8%로 월등히 우세했다. 이어서 지금과 비슷 29.0%, 좋아질 것 27.4% 순이었다.

향후 1년 가계 생활형편 전망

구분	빈도(명)	비율(%)
많이나아질것	229	11.3
다소나아질것	325	16.1
변화없을것	588	29.0
다소나빠질것	502	24.8
많이나빠질것	364	18.0
잘모름	16	0.8
합계	2024	100.0



3. 국민이 직면하는 경제적 애로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경제생활 애로이자 고민거리는 ‘생계비부담’ (24.6%)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자리 불안’ (21.9%), 건강 (16.0%), 주택·주거불안정(15.1%), 교육·육아(11.1%) 순이었다.

4개월 전 조사에서는 일자리불안이 가장 큰 애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금번 조사에서는 ‘생계비부담’ 증가가 일자리 불안 등 다른 고민거리를 제치고 가장 큰 경제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¹⁾

이는,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임시직 실업자의 대폭적 증가 등 문제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우려감으로 불안한 일자리를 가장 우려했으나,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자신의 생계가 걱정될 정도로 생계비부담 증가 문제를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 지난 8월 조사에서는, ‘불안한 일자리’ (23.3%), 생계비 부담(22.4%), 주택·주거(16.0%), 건강(15.9%), 교육·육아(10.7%) 순이었다.

국민이 인식하는 최대 고민거리

구분	빈도(명)	비율(%)
일자리불안	444	21.9
생계비부담	498	24.6
주택주거불안정	305	15.1
건강	325	16.0
교육및육아	225	11.1
결혼임신출산	88	4.3
잘모름	140	6.9
합계	2024	100.0



제3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제3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경제정책들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을 진단하고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정책의 핵심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제2기 경제팀에서는 이를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포용적 성장)의 3축이라 부르고 있다). 또한 일자리창출을 국정의 제1목표로 표방하였다.

성장률 하락과 제조업 부진, 실업률 급증, 소득격차 확대, 자영업의 몰락 등 국민들은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한 전문가들과 국민여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정책의 부작용 등에 대한 확실한 해법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연 국민들이 이러한 현 정부의 아전인수식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시장과 전문가들의 평가와는 어떻게 다른지 등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즉,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일자리정책, 최저임금 인상정책, 재정확대정책, 탈원전 에너지경제정책 등 5가지 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종합적 관점에서의 평점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1. 소득주도성장정책 평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본 조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정책, 즉 근로자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전체적인 경제 성장발전을 이루겠다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

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29.1%인 반면, (부분적)보완·수정·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은 67.9%로 집계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속적 추진 29.1%, 부분적 보완 21.9%, 전반적 수정·보완 28.3%, 폐기 17.7%, 잘모름 3.1% 순으로 나타났다.²⁾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구분	빈도(명)	비율(%)
지속 추진	588	29.1
부분 보완	443	21.9
전반적 수정보완	573	28.3
폐기	359	17.7
잘모름	62	3.1
합계	2024	100.0



다만, ‘부분적 보완’ 까지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분류한다면 정책의 기본방향 유지(51.0%)가 전반적 수정·폐기(46.0%)보다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약간 앞서는 해석도 가능하다.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정치적 이념성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도성향과 보수성향의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비율이 70%를 초과하며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지난 8월 조사에 비해 보완·수정·폐기를 요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반면 진보 성향의 경우 4개월 전 조사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판매영업서비스직·주부의 부정 인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월 조사 대비 그 수준이 높아졌다. 이어서 학생, 무직(실직)자의 부정적 평가 비율 역시 60%대를 넘기며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2) 지난 8월 조사에서는 긍정적이 48.2%, 부정적이 46.8%, 잘모름 5.0%로 나타났다.

이념성향·직업별 소득주도성장 평가

구분		추진(%)	보완·수정·폐기(%)
이념성향별	보수(34.8%)	24.4 (25.6)	72.2 (69.8)
	중도(25.4%)	21.7 (19.1)	76.4 (74.8)
	진보(39.8%)	37.8 (36.1)	58.7 (59.3)
직업별	자영업	25.0 (23.5)	74.0 (72.3)
	판매영업서비스직	23.7 (28.4)	73.7 (68.2)
	주부	20.6 (24.1)	75.2 (69.2)
	학생(19세이상)	36.4 (14.8)	61.5 (82.3)
	무직·실직·퇴직	29.3 (23.1)	66.0 (65.8)

* 괄호 속은 2018.8월 조사분석 결과이다.

2. 일자리정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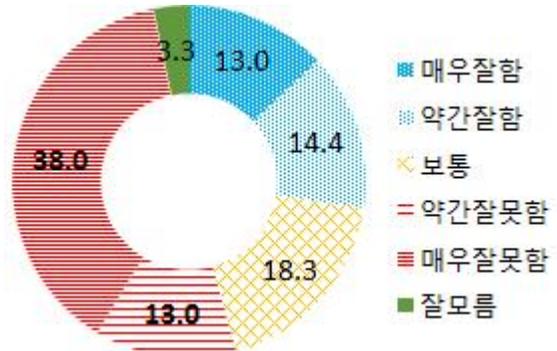
1)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이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한 피해가 그 주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일자리정책 평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50.9%로 잘하고 있다는 27.4%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8월 조사에서의 부정적 평가(48.1%)에 비해 부정 인식 비율이 증가하였다.

※ [8월조사] 잘하고 있음 27.7%, 보통 21.2%, 잘못하고 있음 48.1%

문재인 정부에서의 일자리정책 평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잘함	263	13.0
약간잘함	292	14.4
보통	370	18.3
약간잘못함	262	13.0
매우잘못함	769	38.0
잘모름	68	3.3
합계	2024	100.0



2) 일자리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배경

일자리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예문으로 제시한 5가지 이유 중 “최저임금 인상” (36.2%)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이어서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확대 정책(24.2%), (청년)실업률 증가(20.8%)의 순으로 나타났다.

8월 조사 이후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을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주요인으로 꼽았으며, 공무원 증원, 실업률 증가,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과제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측면이다.

일자리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주된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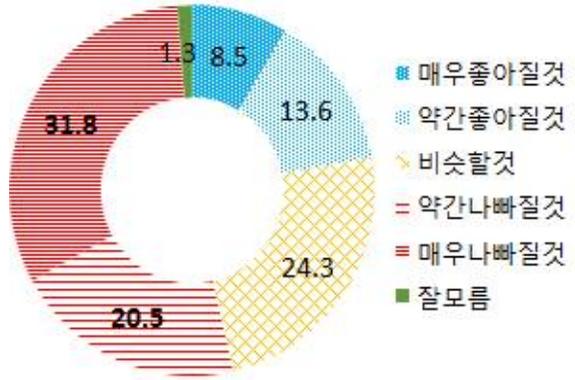
3) 고용상황에 대한 전망

향후 1년의 고용상황에 대해서 ‘나빠질 것(52.3%)’으로 보는 응답자가 ‘좋아질 것(22.1%)’으로 보는 응답자보다 2배 이상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8월조사] 좋아질 것 26.1%, 비슷할 것 23.4%, 나빠질 것 48.4%

향후 1년 고용상황 전망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좋아질것	173	8.5
약간좋아질것	275	13.6
비슷할것	492	24.3
약간나빠질것	415	20.5
매우나빠질것	643	31.8
잘모름	27	1.3
합계	2024	100.0



문재인 정부에서 표방하는 핵심 경제정책 분야인 일자리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그 주된 요인임을 금번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향후 고용상황에 대해서 8월 조사에 비해 긍정인식과 부정인식 간 비율의 간격이 더욱 확대된 점이다. 이는 급증하는 실업률 현상과 더불어 향후 고용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절망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아래 향후 1년 고용상황 전망 (8월·12월 조사 비교)



3. 최저임금 정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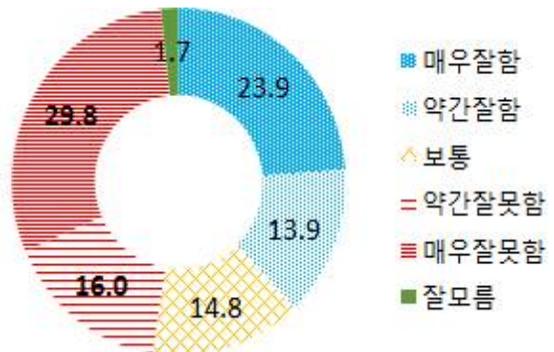
최저임금 인상문제는 금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국민 여론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내년도 인상 부분에 관해서는 시행령 등의 개정이 논의 중이므로 변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이에 대한 국민 인식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1)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

금년도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전년도 대비 16.4%인상 7,530원)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비율이 45.8%로 “잘했다(37.8%)”는 긍정 평가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 평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잘함	483	23.9
약간잘함	282	13.9
보통	299	14.8
약간잘못함	325	16.0
매우잘못함	602	29.8
잘모름	34	1.7
합계	2024	100.0



특이점은 응답자의 이념성향별로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본 결과, 진보성향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 비율이 8월 조사에 비해 8.2%p 대폭 감소한 반면, 부정적 평가 비율은 4.8%p 증가했다는 점이다. 보수·중도성향의 국민들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다.

※ [8월조사] 진보성향 응답자 비율은 잘함(57.3%), 못함 (29.4%)

직업별 응답자 중 자영업종사자와 무직(실직)자의 경우 최저임금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이 8월 조사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높았다. 연령별로는

20~40대의 경우 긍정적 평가가 높은 반면 50~60대이상은 부정적 평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직업별 금년도·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평가

구분		금년도(%)		내년도(%)	
		잘함	못함	지속추진	속도조절·고정 필요
이념성향별	보수(34.8%)	30.3	53.9	19.3	76.6
	중도(25.4%)	30.4	52.9	15.7	81.2
	진보(39.8%)	49.0	34.1	29.1	66.8
직업별	자영업	29.3	54.8	17.8	80.0
	무직·실직·퇴직	38.6	40.6	20.0	73.0

2)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정부에서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10.9%, 8,350원)에 관해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거나 임금인상이 불필요하다” (73.8%)는 비율이 “지속 추진해야한다” (22.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평가

구분	빈도(명)	비율(%)
지속추진	451	22.3
속도조절필요	800	39.5
불필요	695	34.3
잘모름	78	3.9
합계	2024	100.0



현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지난 8월 조사 대비 더욱 높아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되는 등 보완 및 속도조절 필요, 불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

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 평가에 대해서 진보성향 국민들의 긍정적 여론이 대폭 감소하고 부정적 여론이 증가한 점인데, 이는 현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전면적인 동의를 부인하는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평가 (8월·12월 조사 비교)



4. 재정투입 확대 정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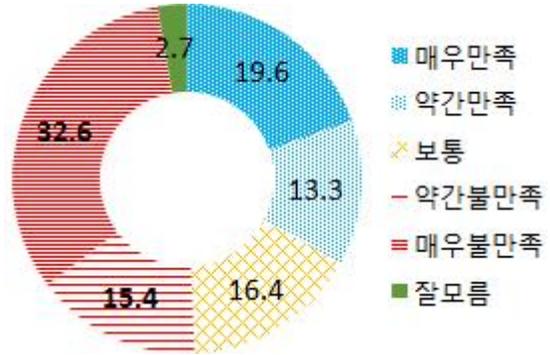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 증원, 문재인케어 건강보험 개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방대한 예산의 투입을 거듭하고 있다. 현 정부가 국내경제 침체 상황을 부인함과 동시에 이러한 확장적 재정 투입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에 관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재정건전성을 국가재정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관련된 국민 여론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1) 재정투입 확대에 대한 인식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설문해 본 결과, 전문가들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전체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8.0%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만족하고 있다는 비율은 32.9%에 불과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만족	396	19.6
약간만족	269	13.3
보통	332	16.4
약간불만족	312	15.4
매우불만족	660	32.6
잘모름	55	2.7
합계	202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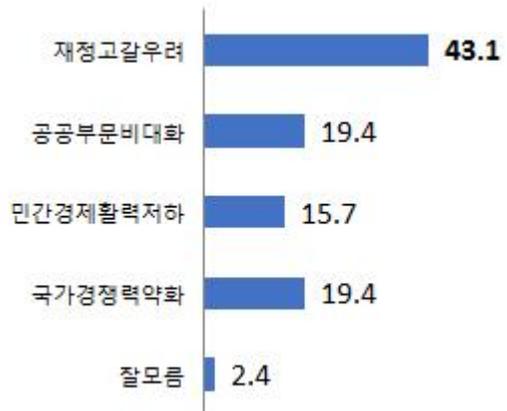


2)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배경

부정적 평가의 주된 이유는, “재정고갈 우려” (43.1%) 비율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며, 이어서 국가경쟁력 약화(19.4%), 공공부문 비대화(19.4%), 민간 경제 활력 저하(15.7%) 순으로 집계되었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재정고갈우려	419	43.1
공공부문비대화	189	19.4
민간경제활력저하	153	15.7
국가경쟁력약화	188	19.4
잘모름	23	2.4
합계	97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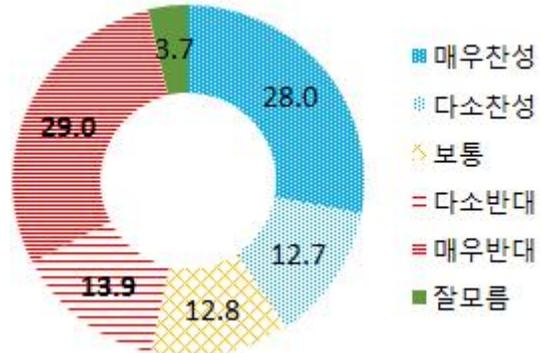
5. 탈원전 에너지 경제정책 평가

1)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평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비율이 42.8%으로, “찬성” (40.7%)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 평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찬성	567	28.0
다소찬성	256	12.7
보통	258	12.8
다소반대	281	13.9
매우반대	586	29.0
잘모름	75	3.7
합계	2024	100.0



하지만, 정치이념·성향에 따라 분류해 본 결과 중도층의 경우 부정적 여론이 8월 조사 대비 보수층의 상승폭보다 훨씬 컸던 반면, 진보층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즉 ‘보수·중도=반대, 진보=찬성’으로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등 경제 관련 다른 정책과는 상이하게 8월 조사 대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탈원전’이라는 정책용어가 이미 정치적 이념화로 고착화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념성향별 탈원전 에너지정책 평가

		찬성(%)	반대(%)
이념성향별	보수(34.8%)	32.2 (29.9)	54.0 (53.3)
	중도(25.4%)	28.8 (31.9)	51.0 (48.0)
	진보(39.8%)	55.6 (55.5)	27.9 (27.6)

* 괄호 속은 2018.8월 조사 결과이다.

2) 탈원전에 찬성하지 않는 이유

한편,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다’ 라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 본 결과, “정치이념에 치우친 정책” (36.5%)이 ‘전력공급 불안정’ (20.3%), ‘전기료인상·가계부담증가’ (15.6%), ‘일자리감소’, ‘원전수출 악영향’ 등의 이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역시 ‘탈원전’이라는 정책용어가 우리 국민들의 이념성향과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측면으로 해석된다.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반대하는 주요 요인

구분	빈도	비율(%)
전기료인상	158	18.2
공급불안정	194	22.4
수출악영향	110	12.7
일자리감소	90	10.3
정치이념에 치우침	304	35.0
잘모름	12	1.4
합계	867	100.0



6.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1) 종합 성적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5개 분야(소득주도성장론, 일자리, 최저임금, 확장적 재정, 탈원전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개별 정책 조사와는 별도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종합적 인식을 평가하기 위해 ‘출범 후 19개월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성적표’ 를 설문을 통해 확인해보았다.

그동안 추진된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점수는 5점 만점에 2.741점으로 나타났다.³⁾ 지문에서 편의상 ‘수’ 는 5점, ‘우’ 는 4점, ‘미’ 는 3점, ‘양’ 은 2점, ‘가’ 는 1점으로 설정한다면, 중간점수인 3점(미)에 미치지 못하는 2점대(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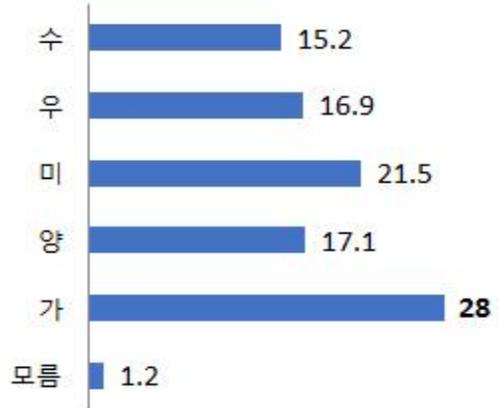
같은 조사결과를 달리 분석해 보면, 아래 그림과 표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 19개월간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양·가)가 45.1%로 긍정적 평가(수·우, 32.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각 성적에 대한 빈도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가’ 이며, 28.0%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어떠한 접근방법으로 해석하든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는 낙제점에 가까운 ‘매우 부정적’ 이라고 해석된다.

3) 각 점수별 빈도수를 곱한 값(5,482)의 총합을 ‘잘 모름’ (25명, 1.2%)을 제외한 2,000명으로 나눈 값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종합 성적표

구분	빈도(명)	비율(%)
수	309	15.2
우	343	16.9
미	436	21.5
양	345	17.1
가	567	28.0
모름	25	1.2
합계	2024	100.0



2) 이념성향·지역·직업·연령별 분석 결과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평가에 관련된 조사를 이념성향별, 지역별, 직업별, 연령별로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8월 조사 대비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긍정적 인식 비율은 감소한 반면, 부정적 인식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적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인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울산·경남(55.1%)이며, 특히 강원·제주(52.6%) 지역은 12.3%p 급상승하였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종사의 부정적 인식 비율이 5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60대이상 연령대에서 부정적 인식 비율이 50%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적 인식 비율 대비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념성향·지역·직업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종합평가

		잘함(%)	못함(%)
이념성향별	보수(34.8%)	30.6 (23.6)	54.8 (58.6)
	중도(25.4%)	23.7 (20.8)	51.7 (44.4)
	진보(39.8%)	39.0 (43.7)	32.2 (30.2)
지역별	서울	32.8 (31.7)	46.6 (46.1)
	인천·경기	34.4 (31.8)	43.2 (45.4)
	부산·울산·경남	24.2 (26.3)	55.1 (53.8)
	대구·경북	18.3 (24.9)	51.8 (55.2)
	호남권	47.4 (41.8)	21.6 (29.4)
	충청권	32.8 (28.0)	45.3 (41.9)
	강원·제주	37.9 (39.8)	52.6 (40.3)
직업별	농림어축산업	37.6 (27.8)	38.0 (46.9)
	자영업	28.4 (25.8)	53.3 (53.8)
	판매영업서비스직	26.9 (29.6)	48.3 (45.9)
	생산기능노무직	34.6 (38.6)	46.8 (45.3)
	사무관리전문직	41.0 (39.4)	36.1 (37.9)
	주부	27.0 (30.1)	47.6 (45.1)
	학생(19세이상)	20.3 (19.7)	42.5 (52.5)
	무직·퇴직	35.4 (24.7)	43.9 (45.4)
연령별	20대	31.9 (26.7)	39.5 (52.3)
	30대	44.6 (43.1)	39.0 (35.8)
	40대	41.0 (39.8)	36.0 (42.6)
	50대	23.6 (28.6)	53.8 (48.3)
	60대 이상	23.5 (21.1)	53.5 (48.3)

* 괄호 속은 2018.8월 조사 결과이다.

* 지문 중 ‘양·가’는 못함으로, ‘미’는 보통, ‘수·우’는 잘함으로 편의상 분류하였다.

제4장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

제4장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나라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며, 어떤 분야의 개혁을 우선적으로 기대하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소득양극화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소득격차 해소와 더불어 일자리 확충이며, 가장 중요한 개혁분야는 노동시장구조 개혁이라는 여론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8월의 조사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다.

1. 한국 경제의 주된 문제점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소득양극화’ 라고 응답한 비율이 46.0%로 절대적으로 높았다. 이어서 ‘저출산·인구감소’ (16.2%), 낮은 성장률 (12.2%), 사회적자본 부족(10.3%), 대내외 경제리스크 확대(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중 저성장문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소득 양극화, 대내외리스크 확대, 협력과 신뢰 등 사회적 자본 부족이 해소되어야 할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급증하는 실업률과 소득격차 확대 등에 따른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원인진단과 해법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 여론은 소득격차 확대에 의한 양극화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일자리 확충’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시장질서 확립(22.6%)과 기업투자 확대(19.9%)라고 응답한 비율도 일자리 확충과 큰 차이 없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경제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 인식

	빈도(명)	비율(%)
일자리 확충	566	27.7
공정경제 실현	461	22.6
가계소득확충	277	13.6
4차 산업혁명 대응	233	11.4
기업투자확대	407	19.9
잘모름	98	4.8
합계	2043	100.0



특이점은, 보수와 중도 성향의 응답자들은 일자리 확충을 최우선 경제정책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은 공정시장질서 확립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고 있다는 점이다.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의 경우 공정시장질서확립을 최우선과제로 꼽은 반면에, 그 외 모든 직종에서는 일자리 확충을 꼽은 비율이 모두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40대, 50대, 60대이상에서는 일자리 확충을, 30대와 40대에서는 공정시장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 우선적 경제개혁 분야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경제의 다방면에서 개과 혁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사 결과 이러한 지속·안정적 성장을 위한 최우선 경제개혁 분야로 ‘노동시장구조의 개혁’ (25.5%)을 우선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전반에서의 규제개혁’ (20.5%), ‘복지제도개혁’ (16.5%)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 분야 우선순위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8월 조사 대비 노동시장구조 개혁을 급선무라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규제개혁과 복지제도 개혁 응답 비율도 소폭 상승함으로써 노동시장구조 개혁과 더불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개혁분야 우선순위 (8월·12월 조사 비교)



제5장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제5장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다양한 여론조사기관과 언론매체 등에서 ‘대통령 국정지지도’ 등의 명목으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수행해 오고 있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대표적이며, 기타 특정 기관이나 언론매체 등에서 의뢰하여 전문조사업체에서 조사·분석한 국정운영 지지율 평가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2월 6일과 7일 양일간 실시되었기에 같은 시기에 시행되었던 타 조사 결과도 함께 대비하여 분석해 본다.

1. 국정운영 평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44.9%)가 긍정(41.0%)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시점에 실시된 복수의 전문조사기관에 비해 부정적 여론이 8%p 내외로 높은 것이다.⁴⁾ 또한, 지난 제1차 조사(8월)에 비해 긍정은 6.3%p 하락한 반면, 부정은 6.2%p 상승한 수치이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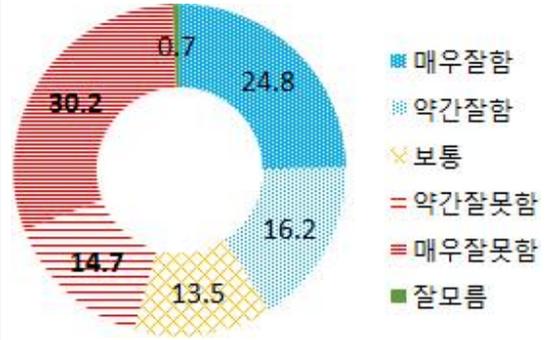
이러한 조사결과들과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가장 최근에 발표된 리얼미터 결과(12월 17~21일, 긍정 47.1%, 부정 46.1%) 및 한국갤럽 결과(12월 18~20일, 긍정 45%, 부정 46%)에 8%p 수준 격차를 감안한다면, 현실적인 긍정평가 비율은 37.0~39.1% 수준으로 계산된다. 즉, 만일 12월 6~7일 양일간 시행된 조사와 동일 모집단을 대상으로 여의도연구원에서 12월 18~20일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30% 중후반대까지 하락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4) 리얼미터 조사(12월 3~7일, 2,516명)에서는 긍정적이 49.5%, 부정적이 45.2%였으며, 비슷한 시기의 한국갤럽 조사(12월 4~6일, 1,002명)에서는 긍정적이 49%, 부정적 41%로 조사되었다.

5) 8월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음이 47.3%, 보통 13.3%, 잘못하고 있음이 38.7%였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잘함	502	24.8
약간잘함	327	16.2
보통	272	13.5
약간잘못함	297	14.7
매우잘못함	612	30.2
잘모름	13	0.7
합계	2024	100.0



2. 이념성향·지역·직업별·연령별 분석

보수와 진보 간 정치이념·성향별 대비가 극명하지만, 보수뿐 아니라 자신이 중도성향이라고 응답한 국민 역시 부정적 여론이 매우 우세했다. 더불어, 1차조사(8월)에 비해서도 부정적 여론이 상당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북전남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는, 영남(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잘하고 있다’는 비율이 다소 높았던 4개월 전 조사와 매우 대조적인 부분이다.

이는, 서울과 인천·경기, 충청권, 강원·제주의 경우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성향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상반되었던 4개월 전 조사와는 달리⁶⁾, 이들 지역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성향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같은 방향을 띄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축산업과 사무관리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서

6) 4개월 전 조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평가에 있어서는 호남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적 여론이 우세했던 반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영남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적 평가비율이 상대적으로 우세했었다.

부정적 여론이 높았는데, 이는, 자영업, 주부, 학생, 무직·실업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긍정적 여론이 높았던 4개월 전 조사와 크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자영업, 주부, 학생, 무직·실업자뿐 아니라, 판매영업서비스직과 생산기능노무직 조차 부정적 여론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긍정 평가(지지율)가 가장 높은 직업군은 사무관리전문직(53.2%)이며, 가장 낮은 직업군은 학생(31.3%)과 무직·실직자(32.3%)였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긍정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20대 및 50대 이상은 부정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4개월 전에는 20대의 경우 긍정과 부정 비율이 비슷한 반면 30~50대의 경우 긍정 비율이 높았으며, 60대 이상은 부정적 인식 비율이 높았었다. 다시 말해 60대 이상 뿐 아니라 20대, 50대 조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념성향지역·직업별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구분		잘하고 있음(%)	잘못하고 있음(%)
이념성향별	보수(34.6%)	34.3 (34.7)	55.0 (50.7)
	중도(24.3%)	29.7 (36.4)	52.9 (44.4)
	진보(41.1%)	53.9 (64.4)	30.9 (25.1)
지역별	서울	43.6 (47.7)	43.3 (36.2)
	인천·경기	42.3 (47.8)	45.2 (38.4)
	부산·울산·경남	28.2 (38.7)	55.1 (49.9)
	대구·경북	28.2 (35.7)	55.2 (48.0)
	호남권	59.5 (73.2)	21.2 (16.2)
	충청권	45.3 (43.0)	43.2 (39.4)
	강원·제주	43.1 (50.7)	47.9 (39.2)
직업별	농림어축산업	47.6 (48.9)	37.0 (34.1)
	자영업	35.8 (40.9)	53.6 (45.7)
	판매영업서비스직	37.6 (44.5)	50.1 (36.9)
	생산기능노무직	41.5 (47.6)	45.2 (40.4)
	사무관리전문직	53.2 (62.1)	36.2 (27.4)
	주부	35.0 (39.2)	48.5 (42.6)
	학생(19세이상)	31.3 (38.2)	40.1 (50.2)
	무직·퇴직	37.6 (38.1)	41.1(45.9)
연령별	20대	38.8 (45.9)	41.6 (43.1)
	30대	51.3 (56.7)	38.4 (32.3)
	40대	50.6 (55.0)	35.7 (35.1)
	50대	36.6 (45.4)	52.5 (37.5)
	60대 이상	31.2 (37.1)	53.0 (43.6)

* 괄호 속은 2018.8월 조사 결과이다.

제6장 시사점 및 결론

제6장 시사점 및 결론

국민 경제인식에 관한 본 여론조사 분석을 통해 문재인 정부 아래서의 생계비부담과 불안한 일자리 등 국민들의 절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들은 현 정부 아래서의 생활형편 뿐 아니라 당장 눈앞의 1년내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매우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이나 일자리정책, 그리고 세간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재정확대정책, 탈원전에너지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들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8월의 제1차 조사에 비해 거의 모든 경제정책 분야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된 것을 여론분석 결과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개별 경제정책들에 대한 각각의 평가와는 별도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여 개월 동안의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성적표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해 본 결과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지역별로는 호남권,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 연령별로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층에서 부정적 인식(양, 가)이 긍정적인 경우(수, 우)보다 높게 나온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경제정책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하루빨리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정책의 전환 내지 대대적 보완을 주문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보수는 물론 ‘중도’ 성향의 국민들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진보성향의 국민들조차 긍정인식비율이 낮아지고(43.7%→39.0%), 부정인식비율이 높아진(30.2%→32.2%) 점 등도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trade mark로 볼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및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정치이념성향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탈원전 등의 정책용어가 정치적 이념화

되어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⁷⁾

또한, 국민들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확충’이 최우선적 과제 중의 하나이며, ‘노동시장구조의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한 개혁분야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은, 국민여론이 어느 경제전문가들의 견해와 놀랍게도 일치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발전이 중요함에도 국민들은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양극화’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정부와 정치권에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다.

이번 연구는 경제문제,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주된 목적이었지만, 경제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여론도 분석대상 중의 하나였다. 분석 결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여론은 부정(44.9%)이 긍정(41.0%)을 앞지르고 있었는데, 같은 시기에 시행된 여타 여론조사들보다 약 8%p 내외의 격차가 확인되었다. 즉, 정기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대중적인 복수의 조사업체(리얼미터, 한국갤럽)의 국정지지율 조사결과는 현실과 적지 않은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12월 셋째 주인 현 시점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30% 중후반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분석결과 중의 하나는, 보수와 진보 성향 간 극명한 대비가 확인되는 가운데 중도성향 국민의 경우 부정적 여론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이다. 더불어서, 지난 8월 조사시와는 달리 사무관리전문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업군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30대 및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도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7) 응답자 중 보수:중도:진보 비율이 34.8:25.4:39.8로, 진보성향의 응답자 비율이 보수 비율에 비해 다소 높았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05.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성장률 하락 ②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③ 소득 양극화
 ④ 대내외 리스크 확대 ⑤ 협력, 신뢰 등 사회적자본 부족 ⑥ 잘 모르겠다
06.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선생님 덕의 살림살이가 좋아졌습니까? 혹은 나빠졌습니까?
 ① 매우 좋아졌다 ② 약간 좋아졌다 ③ 이전과 비슷하다
 ④ 약간 나빠졌다 ⑤ 매우 나빠졌다 ⑥ 잘 모르겠다
07. 선생님께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즉 노동자의 임금 등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전체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③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정책방향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
 ④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므로 폐기해야 한다
 ⑤ 잘 모르겠다
08. 선생님께서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잘했다 (문10으로) ② 약간 잘했다 (문10으로) ③ 보통이다 (문10으로)
 ④ 약간 잘못했다 (문09로) ⑤ 매우 잘못했다 (문09로) ⑥ 잘 모르겠다 (문10으로)
09.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10으로)
 ① 실업자·청년실업률 증가 ②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③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확대 정책 ④ 경직적 근로시간 단축
 ⑤ 그외 다른 이유 ⑥ 잘 모르겠다
10.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고용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나빠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① 매우 좋아질 것이다 ② 약간 좋아질 것이다 ③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④ 약간 나빠질 것이다 ⑤ 매우 나빠질 것이다 ⑥ 잘 모르겠다
11.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작년대비 16.4%로 대폭 인상되었는데, 선생님께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했다 ② 약간 잘했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잘못했다 ⑤ 매우 잘못했다 ⑥ 잘 모르겠다
12.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결정했는데, 2년간 인상률이 29.1%나 되어 시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시급1만원 공약달성을 위해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최저임금을 인상하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③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불필요하다
 ④ 잘 모르겠다

13.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공무원 수 증원,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개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정부의 최근 재정 지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문15로) ② 약간 만족 (문15로) ③ 보통 (문15로)
 ④ 약간 불만족 (문14로) ⑤ 매우 불만족 (문14로) ⑥ 잘 모르겠다 (문15로)
14. 그렇다면, 불만족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문15로)
 ① 막대한 세금 투입으로 재정 고갈 우려 ② 공공부문 비대화
 ③ 민간경제 활력 저하 ④ 저성장심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⑤ 잘 모르겠다
15.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에너지정책, 즉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 원전제로시대로 이행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 (문17로) ② 다소 찬성 (문17로) ③ 보통 (문17으로)
 ④ 다소 반대 (문16으로) ⑤ 매우 반대 (문16으로) ⑥ 잘 모르겠다 (문17로)
16.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문17로)
 ① 전기료 인상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
 ② 전력공급의 불안정성 우려
 ③ 원전사업 해외 수출에 악영향
 ④ 원전건설 중단, 원전산업 붕괴에 따른 일자리 감소
 ⑤ 정치이념에 치우친 정책
 ⑥ 잘 모르겠다
17.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일자리 창출 ② 공정경제 실현 ③ 소득 격차 해소 ④ 규제 개혁
 ⑤ 기업투자 확대 유도 ⑥ 4차산업혁명 대응 ⑦ 잘 모르겠다
18.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노동시장구조 개혁 ② 경제 전반에 대한 규제개혁
 ③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개혁 ④ 재정·공공부문개혁
 ⑤ 복지제도 개혁 ⑥ 잘 모르겠다
19. 앞으로 1년간 선생님 님의 생활형편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나빠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① 많이 나아질 것이다 ② 다소 나아질 것이다 ③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④ 다소 나빠질 것이다 ⑤ 많이 나빠질 것이다 ⑥ 잘 모르겠다
20.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9개월간의 경제 정책을 '수우미양가'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선생님은 어떤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① 수 ② 우 ③ 미 ④ 양 ⑤ 가 ⑥ 잘 모르겠다
21. 정치이념성향 : 선생님의 정치적인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더 가까우십니까?
 ① 보수 ② 중도보수 ③ 중도 ④ 중도진보 ⑤ 진보

22. 국정운영 현재 평가 :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약간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잘 못하고 있다 ⑤ 매우 잘 못하고 있다 ⑥ 잘 모르겠다

23. 직업 : 마지막으로 통계 처리를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농업/임업/어업/축산업 ② 자영업 ③ 판매/영업/서비스직 ④ 생산/기능/노무직
⑤ 사무/관리/전문직 ⑥ 주부 ⑦ 학생 ⑧ 무직/퇴직/기타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연정책연구 YDI Report (YR2018-04)

국민 경제인식 조사 분석

문재인정부 20개월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평가

인 쇄 2018년 12월 27일

발 행 2018년 12월 27일

발행인 김선동

발행처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3층

전 화 02) 6288-0502

팩 스 02) 6288-0558

인쇄처 원기획

여의도연구원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정당의 발전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연정책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연정책연구」의 전문은 www.ydi.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